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 - 마산지역 토호세력의 뿌리

김주완

1. 머리말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지방권력 심판론’을 내걸었다.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 살면서 지방권력의 문제를 몸으로 느껴온 필자로 선 눈이 번쩍 뜨이는 구호였다. 지방 사람들은 서울만 쳐다보며 살아 왔고,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믿는 나라에서 ‘지방권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사건이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방권력’이라는 말에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낯설게 여기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눈만 뜨면 서울에서 서울 사람들이 서울의 시각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뉴스, 신문도 소위 ‘중앙지’만 보고 생활하는 지방 사람들이 지방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지역 내부의 권력관계를 주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선거에서 한명씩만 뽑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많은 투표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사회구성체나 권력구조에 대해선 청산유수지만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토호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수습기자보다 더 모르는 진보단체의 활동가들도 많다.

필자는 80·90년대 민주화운동이 중앙권력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면, 2000년대 민주화운동은 지방권력을 상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 차원에서 필자는 90년대 후반부터 ‘토호세력 척결 없이 지방자치는 없다’고 주장하며 토호의 실체를 찾아내느라 나름대로 애를 써왔다. 그 과정에서 3년 전에는 마산시장 황철곤의 행위를 가리켜 ‘지방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군사독재시절이 그립다”는 칼럼을 썼다가 1억 원짜리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바 있다.¹⁾ 결국 승소하긴 했지만, 1여 년간 법정을 오가며 허비한 시간과 정력,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되돌려 받을 길이 없다.

이런 처지다 보니 열린우리당의 슬로건이 눈이 번쩍 뜨일 만도 하다. 그러나 과연 열린우리당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음은 작년 〈한겨레〉에 실린 기사 중 일부다. 이걸 보면 열린우리당이 지방권력의 문제를 제대로 알기나 하고 그런 슬로건을 만들었는지 의심스럽다.

정치권이 새마을운동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특혜성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3대 관변단체 지원·육성법(관변단체육성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부담을 우려해 자기당 소속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운동단체 등은 폐지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력을 넣거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오전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각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3대 관변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안을 당론

1) 《경남도민일보》, 2003년 6월 25일자

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3대 관변단체 문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하면 되지 당에서 나서서 폐지안을 주도할 사안은 아니다”며 “우리당 의원들이 당론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폐지안을 내면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도부가 의원들의 폐지안 제출을 만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²⁾

이랬던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선거에서 ‘지방권력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이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토호적결의 가장 첫 단추는 ‘관변단체 지원 전면 중단’이라고 주장해왔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필자는 ‘노무현 정부에 드리는 쓴 소리’라는 제목의 글로 이렇게 충고한 바 있다.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토호를 자기 편으로 끌어안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권도 제2건국위원회라는 새로운 관변단체를 통해 전국의 모든 토호세력을 포섭하려는 전략을 썼다. 그러나 이는 실패했다. 정권 초기엔 DJ정부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통해 기득권을 보장받은 이들이 막상 정권 말기에 이르자 다시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서울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성공하려면 토호세력과 단호히 단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관변단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관변단체는 토호들과 지역행정기관이 유착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 제2건국위 뿐만 아니라 자유총연맹 등 다른 3개 단체의 존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인위적인 해체가 이미 불가능하다면 이들 단체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DJ정권도 초기엔 예산지원을 줄여 자생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이 진정 지방분권과 개혁을 이루려면 이것부터 해야 한다.”³⁾

2) 《한겨레》, 2005년 7월 12일자

3) 《경남도민일보》, 2003년 2월 25일자

그 후 필자는 노무현 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된 김두관 씨를 인터뷰하면서도 제2건국위원회 해체와 관변단체 지원 중단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김 장관 재임 중 제2건국위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징액보조금 제도’만 약간 손질했을 뿐이다.

지역문제, 특히 토호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관변단체 지원 중단을 첫머리에 놓는 이유는 명백하다. 토호와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지역 정치인의 연결 통로이자 유착 고리가 바로 관변단체이고, 이것부터 끊어 없애는 게 지역민주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방권력의 핵심에 토호가 있고, 그들 토호는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과 공생관계를 맺어오면서 스스로 권력으로 성장해온 과정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남의 한 중소도시인 마산지역 현대사를 통해 토호세력의 뿌리를 찾아 나서려 한다.

2. 해방 후 마산지역 우익단체의 뿌리

1945년 해방 직후의 상황부터 보자. 당시 마산 지역사회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은 대략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친일파 출신 인사들이 그들이다. 이들 3파 가운데 해방으로 인해 가장 긴장했던 세력은 당연히 친일파였다. 하지만 마산은 특이하게도 이들 친일파 인사들을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결성에서 배제하지 않고 ‘3파 연합’ 형태의 건준 마산부위원회(위원장 명도석)를 출범시킨다.

건준은 해방 후 지역에서 생겨난 최초의 자치기구인 동시에 사회단체였다. 그러나 잠시나마 사회주의자들과 동거 중이던 친일인사와 무정부주의자들은 한 달 뒤 일제히 건준을 탈퇴하게 된다. 해방 직전 일제가 임명한

마산부회 의원을 지냈던 손형업(재무부장)을 비롯한 이일래(선전부장)·조병기(총무부장) 등 건준 내 우파세력과 무정부주의자 등 26명은 탈퇴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산에 ‘한민회(韓民會)’라는 우익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10월 8일 스미스(Smith) 대위를 중대장으로 하는 미 40사단 선전대가 마산에 도착하기 전인 9월 말쯤의 일이다. 마산에서 우익과 좌익이 완전히 갈라선 것은 바로 이 때부터라고 한다.

이렇게 결성된 한민회는 일제 때 역시 부회 의원을 지냈던 민영학 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총무부장에 조병기(무정부주의자), 조직부장에 유석형(무정부주의 성향), 선전부장에 최철용(신간회 활동경력, 47년 경남경찰국장), 문화부장 이일래(산토끼 동요 작곡가, 이후 미 CIC통역관), 재정부장 손형업 등 조직을 인선한 후 창동에 사무실을 두었다. 한민회에는 이들 간부 외에도 손문기, 강태호, 안장수, 최양기, 손성수, 박재환, 옥치윤, 김수돈, 김관수 등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익인사들이 건준을 탈퇴한 후 마산 건준은 10월초 서울과 부산에 이어 마산시 인민위원회(인위)를 결성한다. 마산 인위에 김명규, 이정찬, 박삼조 등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물론이다.

한민회는 이후 미군이 마산에 진주하자 손문기를 통해 “미군이 한국을 떠나고 나면 인민위원회는 우리를 제거할 것이다. 인민위원회는 공공연한 공산주의자다, 마산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 어떤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시켜야 한다”⁴⁾고 말했다. 또 한민회 간부인 이일래 씨가 미군 특무대(CIC)의 통역관을 맡았고, 해방되던 날 민영학의 집에 함께 모였던 서기홍은 일제 때 판사를 지낸 사람인데, 미군정이 시작되자 데일리 마산 군정사령관의 재판고문을 맡았다.⁵⁾ 이처럼 한민회는 미군정에 대한 열렬한 협조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동시에 인민위원회는 미군정 및 우익과 첨예한 대립상황에 놓이게 된다.

4) 미 40사단 보고서, 《한국 근현대사회변혁운동》(서울 : 풀빛, 1997)

5) 왕수완, <마산유사>, 《경남신문》, 1986년 9월 3일자

인민위원회는 이후 미군정의 집중적인 탄압을 거쳐 46년 2월 4일 민주주의 민족전선으로 개편되며, 한민회는 같은 해 2월 창동 사무실이 좌익세력의 습격에 의해 불타는 수모를 겪은 이후 서울에서 이승만이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 중앙위원회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통합해 결성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마산지부(위원장 손문기)를 만들어 극심한 좌우익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이 같은 좌·우익의 대립과 미군정의 탄압과정에서 좌익세력은 해방 후 최대의 희생자를 낳은 46년 10월 마산 인민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10월 봉기로 마산에서 12~17명, 창원군에서 5명 등 많은 희생자가 났다. 당시 10월 봉기에 참가한 경남도민은 18개 시·군에서 최소 7만4000명, 최대 6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희생자의 숫자나 시위참여인원으로만 본다면 60년 3·15의거나 79년 부마민주항쟁보다 훨씬 대규모의 항쟁이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47년 2월 7일에도 일제히 봉기를 일으켰으나 역시 경남·북에서 39명의 사망자를 낸 후 지하로 잠적하거나 월북하고 말았다.

마산 10월 봉기 때 한 명의 사망자와 여러 명의 부상자를 낸 우익단체들은 봉기가 진압된 직후부터 조직을 정비, 대대적인 좌익소탕에 나서게 된다. 이런 우익단체의 '활약상'은 그들 우익 청년단체에서 펴낸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당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우익청년단체에 대한 자료를 1800여 쪽에 걸쳐 무용담처럼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우익단체의 대표적 인물은 주로 손문기·민영학(국민회), 유석형·손상진(광복청년단·대동청년단), 문삼찬, 조철제, 노병덕·구혜숙(민족청년단), 이인호(서북청년단) 등이다. 특히 민영학이 대표로 있던 국민회는 10월 봉기 직후 좌익에 대한 복수를 위해 서울의 중앙타격대에 지원요청을 했다는 기록도 눈에 띈다.

이런 와중에 제주에선 4·3사건이 발생, 수 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곧 여수사건으로 이어진다. 미군정과 경찰·우익청년단체의 대대적인 좌익소탕을 바탕으로 48년 8월 단독정부 수립에 성공한 이승만 정권은 신속으로 숨어든 좌익 유격대 토벌작전에 나서는 한편 49년 10월에는 좌익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시·군·읍·면 단위로 ‘보도연맹’이란 걸 만들게 된다. 이른바 전향한 좌익으로 구성된 보도연맹은 전국적으로 조직원이 30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결성된 보도연맹은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결국 ‘집단학살’이라는 민족사의 대 비극을 낳게 된다. 마산에서도 1681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남전역에서 드러난 숫자만도 5000여 명에 달하는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아직도 많은 유족들에게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

3. 민간인 학살과 전후 토호세력의 성장

경남은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 4.19 이후 결성된 전국피학살유족회 노현섭 회장⁶⁾이 대한민국 국무원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가족이 학살된 것으로 유족회 측에 신고한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두 113만 명이었다.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마산에서도 1681명이 1950년 8월 학살됐다. 이 같은 학살의 최고책임자는 당연히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다. 경남지역에서 직접 학살을 수행한

6) 1920~1992, 마산시 구산면 안녕마을 출신. 일본 중앙대 법과 졸업. 마산보통상업학교(현 마산상고) 교사. 부산부두노동조합 마산지부장, 대한노총 전국자유연맹 위원장, 마산자유노조 위원장, 사립 마산고등공민학교 교장, 마산시 교육위원. 한국전쟁 당시 일본 와세다대학을 나온 친형을 보도연맹 사건으로 잃었으며, 자신도 트럭에 실려 끌려가던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필사의 탈출을 한 끝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4.19 이후 마산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회장을 맡았고, 경상남도지구 피학살자 유족연합회 이사, 전국유족회 회장을 지냈으나 5.16쿠데타 직후 구속돼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주체는 누구였을까. 또 이들의 지휘에 따라 당시 마산에서 보도연맹 결성을 주도하고 학살에 관여한 군·경 인사와 우익단체 간부들은 누구일까. 그 명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경남경찰국장 최철용(崔喆龍, 경무관) 1949년 6월 13일~1950년 4월 26일
- 마산경찰서장 조영운(曹永云) : 1949년 12월 7일 부림극장에서 보도연맹 결성 당시
- 마산경찰서 사찰계장 정도환(鄭道煥), 형사 강상봉(姜相鳳), 형사 노장현(盧張鉉)
- 마산지구 위무사령관 이유성(李裕成, 육군중령), 마산지구 정보대장 강순원(姜淳元, 해군대위)
- 특무대 마산과견대장 허태영(許泰榮)·이우정(李宇正), 특무계장 이진영(李眞榮), 상사 노양환(盧陽煥)
- 국민회 마산지부장 손문기(孫汶岐), 부지부장 김순정(金順正, 보도연맹 보도부장), 대한청년단장 유석형(柳榑馨), 비상대책위원장 강태호(姜泰鎬), 김중신(金鍾信, 보도연맹 사업부장, 국민회 간부 겸 민보단 고문), 문삼찬(文三贊, 1950년 3월 25일 이후 사업부장, 국민회 간부) 등 우익단체 간부 다수.

이들에 의해 결성된 마산 보도연맹은 검찰지청장과 경찰서장을 위원장과 이사장으로, 마산시장과 창원군수, 형무소장, 경찰서 사찰계장을 지도위원으로 하고, 우익단체인 국민회와 대한청년단 관계자들을 주요 집행간부로 하여 출범하게 된다.

마산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50년 7월 15일 일제히 소집령이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이 소집날짜는 당시 생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의 증언과 60년 4·19혁명 직후의 언론 보도 기록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60년 6월초 <대구일보> 보도는 이렇게 유가족들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마산지사】 인접 거창·함양·산청 등 경남일대의 양민학살사건이 보도됨과 아울러 이곳 마산에서도 6·25 당시 1,500여명을 수장(水葬) 내지 총살한 사실이 백 일하에 폭로되고 있다. 현재 유가족들은 당시의 학살자들을 찾아내어 규탄해 달하는 요구를 내건 ‘데모’까지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83년 (단기=서기 50년 : 필자 주) 7월 15일 군(CIC·HID)과 경찰에서는 시민극장에서 시국강연회가 있다고 보도연맹 가입자를 포함한 양민들을 집합시켜 삽과 팽이 등을 들며 도로보수공사를 하러 간다는 구실로 추력(트럭)에 실어서는 창원군 북면 뒷산과 진해 앞바다에서 각각 수장과 총살을 감행했다 한다.(하략)

학살이 있는 지 10년만인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결성된 마산 지구양민피학살자유우족회(회장 노현섭)는 학살의 가해자로 11명을 고발한다. 1960년 7월 19일자로 마산 검찰지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학살사건의 주범으로 조영운 전 마산경찰서장(현 경남교통협회 이사, 경전여객자동차주식회사 근무 중), 구중억 전 마산경찰서 사찰형사, 최익주 전 형사반장, 이부종 전 형사, 강상봉 전 사찰계장, 정도환 전 사찰계장, 노장현·황임 사찰계 형사, 이우정 전 특무대장, 이진영 전 특무계장, 노양환 전 특무대 상사 등 11명을 지목하고 있다. 이들 가해자 중 보도연맹원 학살의 책임을 지고 처벌은커녕 작은 불이익이라도 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후 행적이 확인되는 학살 가해자들 중 마산을 근거지로 둔 토호세력은 다음과 같다.

○ 최철용 경남경찰국장

경남지역 보도연맹 결성을 주도해 경남도연맹 명예이사장을 맡았던 최철용 경남경찰국장(49년 당시 50세)은 마산 사람으로 해방 직후 마산 건준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친일파 손형업·안장수와 함께 건준에서 ‘축출’ 당해 마산지역 최초의 친미 우익단체인 한민회(韓民會)를 결성한다. 이후 이름이 바뀐 국민회 마산지부에서도 선전부장을 맡았던 최철용은 이듬해인

46년 8월 서울에서 이승만이 발족한 민족통일총본부 마산지역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하며, 이후 유석형과 함께 광복청년단·서북청년단·독립촉성청년단 등을 개편, 대한청년단을 만들었다. 단장은 유석형이 맡았는데, 이 시기에 최철용은 경찰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승만의 사실 친위조직이었던 우익 청년단체 활동을 발판으로 하동경찰서장과 부산경찰서장을 거쳐 경남경찰국장까지 맡게 된 최철용은 퇴직 후 1973년까지 마산에서 생존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⁷⁾

○마산경찰서 사찰계장 정도환, 형사 강상봉, 형사 노장현

정도환은 이후 기록에서 나타나지 않으나, 역시 유족들에 의해 학살 책임자로 지목돼 고발당한 강상봉과 노장현은 보도연맹원 학살이 있었던 1950년에서 10년이 지난 1960년 3.15마산의거 때 또 다시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나선 마산시민들을 끔찍하게 고문한 경관으로 등장한다. 이 때 강상봉은 사찰계장으로, 노장현은 사찰계 주임으로 승진해 있다. 강상봉은 3.15의거 직전까지 '오동동 경무대'라 불리며 마산·창원·진해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유당 국회의원이자 경남도당위원장이던 이용범의 수족이 되어 각종 정치공작을 일삼던 인물이다. 강상봉은 또 3.15의거 당시 노장현과 함께 북마산파출소 방화범을 조작하면서 엄청난 고문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⁸⁾

그는 1950년 보도연맹원 학살에 깊이 개입한 뒤 1952년 대한민국 방위포장을 받았고, 3.15의거 이후 경찰직을 벗었으나 1965년 진주로 가서 해륙물산(주) 대표이사와 서부연탄공업사 대표, 경남냉동주식회사 대표를 거쳐 1981년 마산의 경남에너지(주) 사장까지 받았다. 또한 1985년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1987년에는 재향경우회 경남지부 회장

7) 박계진, 《합포의 야화》(마산: 마산의정동우회, 1973), 50쪽.

8) 김주환, '지역사 다시읽기 47- 3·15의거 (13)' 경남도민일보, 2000년 4월 19일자; 김태룡, <3·15 마산의거의 역사적 고찰> 《마산시사료집 제1집》(마산:마산시사편찬위원회, 1964).

까지 맡는 등 학살과 고문 전력은 그의 삶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했다.⁹⁾ 강상봉과 파트너를 이뤄 학살과 고문에 관여했던 노장현은 4.19 이후 김해의 한 저수지에서 자살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그가 3.15 당시 정권의 무시무시한 용공조작 음모를 수립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살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다른 학살책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인물이다.¹⁰⁾

○ 국민회 마산지부장 손문기

보도연맹 결성과 예비검속, 학살이 이뤄지던 시기 마산의 대표적인 우익 단체인 국민회 지부장이었던 손문기는 45년 친일파 민영학과 함께 건준에서 탈퇴, 마산 최초의 우익단체인 한민회를 결성했다. 한민회의 초대 회장은 민영학이었으나 이후 자신이 회장을 맡아 이승만이 이끌던 독립촉성국민회 마산지부로 이름을 바꾸고 오랫동안 회장을 맡아온 우익운동의 중추적 인물이다. 46년 10월 미군정 하에서 과도입법의원을 지냈으며, 전쟁 이전 제헌국회와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했으나, 전쟁 중 치러진 52년 5월 10일 도의원선거에 당선됐다.

○ 국민회 마산 부지부장 김순정

국민회 부지부장으로 보도연맹 마산지부 결성준비위원회 간사장을 지냈고,¹¹⁾ 이후 결성된 보도연맹 마산지부 보도부장을 맡았던 김순정은 여러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겨우 917표를 얻어 낙선한 인물인데, 전쟁 이후의 행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9) 《경남에너지 30년사》(마산: 경남에너지(주), 2002), 297쪽.

10) 지현모, 《마산의 흔》(마산: 도서출판 엠씨와이, 1994), 202쪽.

11) 《남조선민보》, 1949년 12월 4일자

○ 대한청년단장 유석형

손문기가 마산 우익운동의 중추적 인물이라면, 대한청년단장이던 유석형은 그야말로 우익청년운동의 선봉장이다. 손문기와 함께 45년 10월 민영학과 손형업 등 친일파들이 만든 한민회 결성에 참여한 그는 이 조직에서 조직부장을 맡는다. 앞서 소개한 경남경찰국장 최철용도 이 한민회의 초대 선전부장 출신이다. 이후 유석형과 최철용은 46년 8월 서울에서 이승만이 발족한 민족통일총본부 마산 사무국(사무국장 최철용)을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광복청년단·서북청년단·독립축성 청년단·대동청년단 등 수많은 청년단체를 잇따라 결성, 좌익소탕의 선봉이 된다. 이런 경력으로 말미암아 '만년 청년단장'이라는 호칭¹²⁾을 얻기도 했는데, 이후 57년부터는 손문기에 이어 국민회 지부장을 맡은 것으로 나와 있다.¹³⁾ 국민회는 5.16쿠데타 이후 해산되는데, 그가 60년 3.15의거 당시 반공청년단에까지 관여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자유당의 선거대책 극비문건에는 국민회가 기간단체의 가장 높은 반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선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산청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중엽 마산에서 삼천리사장이란 사진관을 운영했는데, 해방 후엔 아예 사진관 문을 닫고 우익운동을 전업으로 삼았다.

52년 김종신이 자유당 마산시당을 처음 만들 때 조직부장으로 도왔으며, 56년엔 감찰부장을, 57년 4월엔 고문을 맡았다. 52년 4월 25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한청년단 후보로 출마해 당선, 마산시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 비상대책위원장 강태호

전쟁 당시 민간 치안기구로 만들어진 비상시국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준경찰기구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활동자금도 준조세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강제징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기구의 위원장을 맡은 강

12) 박계진, 위의 책 51쪽.

13) 《약진 마산》(마산: 마산일보사, 1957), 157쪽.

태호 역시 한민회 출신이다. 그는 해방 직후 마산 건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친일파·무정부주의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 3파가 연합한 건준을 태동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건준에서 산업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곧이어 건준의 좌익적 색채에 반발해 손문기 등과 함께 탈퇴해 한민회를 만든 인물이다.

○ 보도연맹 사업부장, 국민회 간부 겸 민보단 고문 김종신

기업가로서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각 계층에 걸쳐 적어도 마산을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이라면 거의 다 해온 정상의 인물’, ‘마산을 상징하는 인물’¹⁴⁾로 우익인사들 중에서도 가장 출세한 사람이다. 따라서 김종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를 제대로 모르고서는 마산의 지배세력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김종신은 그야말로 해보지 않은 게 없을 정도이다. 경제력은 물론 행정 권력과 정치권력, 거기에다 언론권력까지 다 잡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권력을 잘 살펴보면 시대마다 주류에 편승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민족의식이 고조될 땐 거기에 앞장서기도 했다가, 일제 말기 탄압이 심해지자 부왜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당시 정국을 장악했던 건국준비위원회에 적극 참여, 문화 사업을 벌이다가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건준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탄압할 조짐을 보이자 다시 우익으로 돌아선다.

또한 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신문 창간에 참여해 초대 사장을 맡았고, 미군정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조선독립촉진마산협의회 부의장을 맡아 군정 당국과 교류를 맺으면서 적산을 관리하는 엄청난 이권이 걸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 후 한국전쟁기에는 이른바 ‘민족진영 인사’로서 보도연맹 결성작업에도 적극 참여했고, 국민회라는 대표적인 우익단체를 통해 자신

14) 이진순, 《오늘의 마산》(마산: 편찬위원회, 1970), 214쪽.

의 입지를 키워나가다 자유당 창당에 적극 참여, 초대 마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이를 발판으로 마산시의원과 마산시장에 연이어 당선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3대 국회의원까지 거친 그는 4대 국회의원 낙선과 함께 3.15마산의거라는 상황에서 사태가 이미 기울어졌다는 것을 느끼자 민심 수습위원회를 구성, 시민의 분노를 달래려 노력한다.

그러나 이미 민심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을 감지하자 2공화국 시기엔 철저히 잠적해 있던 중 5.16쿠데타가 일어나자 재기를 노리다 자유민주당이라는 신생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나 그는 24일 만에 자신이 만든 지구당을 해체하고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에 복당, 중앙상임위원까지 오르게 된다. 그 후 70세에 가까운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방송사 사장을 지낸 후,¹⁵⁾ 1978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된다.

○ 보도연맹 사업부장, 국민회 간부 문삼찬

마산 보도연맹에서 역시 국민회 간부로 김종신의 사업부장직을 넘겨받았던 문삼찬은 1914년생으로 김종신보다 10년 아래다. 1948년 민족청년단 경남지부 마산시단장¹⁶⁾이었던 문삼찬 역시 마산에서 대흥주조장을 하던 양조장업자인데, 이후 백광소주 사장이 된다. 1956년 김종신이 자유당 마산시당 위원장을 할 때 부위원장으로 그를 돕는다. 또 55년 10월 결성된 마산문화인협의회(문협)의 2대 의장을 맡았고, 3대 회장을 맡았으며, 57년 마산체육회장을 맡는 등 문화·체육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 3.15부정선거 때는 김종신과 함께 자유당 마산시당 기획위원이었으며, 5.16쿠데타 이후 1963년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잠시 민주당 경남 제1 지구당을 결성, 위원장을 맡기도 하지만, 나중엔 결국 공화당에 합류한다.

15) 그는 신문사와 방송사 사장으로 있던 1971년에도 공화당 경상남도지부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도지부 당직자 명단> 민주공화당 경상남도지부(부산, 1971).

16)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서울: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1136쪽.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우익단체 간부들의 이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1950년대 그들의 정계진출이다. 사실 한국전쟁 이전에도 그들 우익단체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력에 도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국민회 지부장이던 손문기는 미 군정 통역관을 하면서 국민회의 지원으로 과도입법의원을 지냈으나, 정부수립 후 1948년 5월10일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에서는 외지인인 권태욱 후보에 밀려 형편없는 표차로 낙선한다. 창원 갑구에선 국민회 소속 김태수 후보가 적은 표차지만 당선한 것과 대비된다. 전국적으로도 200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민회 후보가 55명이나 당선되고,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민족청년단 6명이 당선된 것을 보면 마산의 국민회 지부장이 얻은 표는 의아할 정도이다.

전쟁 직전인 50년 5월30일 치러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손문기는 역시 권태욱 후보에게 큰 표차로 연거푸 패하고 만다. 특히 이 선거에는 후보가 난립, 김순정이 국민회 후보로, 박경률이 민보단 후보로 나가지만 각각 917표와 563표에 그쳐 당시 우익단체가 시민들에게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때도 창원 갑에서는 대한청년단 김병진이 당선됐지만, 마산시민은 여전히 여당과 국민회를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권의 불안정한 상황은 6.25가 터지고 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우선 52년 4월 25일 지방선거에서 자유당으로 출마한 김종신과 대한청년단으로 출마한 유석형이 보기 좋게 시의원으로 당선된다. 이어 열흘 후에는 간선이긴 하지만 김종신이 마산시장으로 당선된다. 전국적으로도 여당인 자유당은 국민회와 대한청년단을 합칠 경우 무려 56.5%에 달하는 지방을 장악하게 된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김종신은 54년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태욱(2439표)은 물론 허윤수(1만5148표)를 제치고 1만7372표를 얻어 당선된다. 전쟁이 김종신과 유석형을 비롯한 우익세력의 기반을 강화시켜줬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대목이다.

4. 3·15와 4·19도 체결 못한 토호세력

앞에서 살펴봤듯이 김종신·손문기·유석형·문삼찬 등 우익단체를 통해 성장한 이들은 전쟁과 민간인학살을 거치면서 50년대의 대표적인 토호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50년대는 자유당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마산의 자유당은 김종신·이병진·이주만·손문기·조병기·이일래·김주홍·유석형·박기수·조철제·서점용 등 17명으로 구성된 결성준비위원회에 의해 52년 4월20일 정식 발족하게 된다.¹⁷⁾

이들 준비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해방직후 건국준비위원회 마산부위원회(건준·위원장 명도석)에서 탈퇴하거나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손문기·조병기·이일래는 한민회 출신, 조철제·서점용·박기수는 대동청년단 출신이었다. 유석형은 두 단체 모두 관여했다.

이렇게 발족된 초창기 자유당 마산시당부는 △위원장에게 김종신 △부위원장이 이주만·김행도 △총무부장 조병기 △조직부장 유석형으로 간부명단이 전해진다.

해방 이후 격렬한 좌우대결과 반대파 숙청·민간인 학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반 이승만 세력이 제거된 후 마산에서 공식적인 정당의 형태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은 60년 3·15마산의거가 일어날 때까지 또 다른 보수정당인 민주당과 함께 약 10년간 마산의 정치·경제를 장악하게 된 것이다.

마산사람들은 3·15의거를 주도한 민주당에 대해 적잖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시 철권·폭압통치의 대명사였던 이승만 정권을 대체할 유일한 정당이었으니 그럴 법도 했다. 그러나 마산의 민주당도 그 뿌리에 있어서는 자유당과 별반 다를 게 없으며, 해방 직후 친일·친미·반공세력을 결집체인 한민당

17) 이진순, 《오늘의 마산》(마산: 편찬위원회, 1970), 57쪽

과 께를 같이하고 있다. 45년 9월 서울의 친일·친미·반공세력이 건준에 대항하기 위해 한민당을 만들었다면, 마산의 그들은 한민회(위원장 민영학)를 만들었다. 이 때 한민회 결성을 주도한 사람 중 민영학과 손성수가 있었다.

이들은 이후 한민회가 이승만이 만든 독립촉성국민회 마산지부(위원장 손문기)로 개편된 후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6·25가 발발하자 한민당의 후신격인 민주국민당 마산시당부(민국당·위원장 손성수)를 결성(51년 7월 26일)한다. 따라서 민영학·손성수는 마산지역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인 정당 활동을 시작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민회와 국민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손문기 김종신 조병기 유석형 김종신 등은 자유당 마산시당부(위원장 김종신)를 결성(52년 4월 20일)함에 따라 마산의 우익인사들은 친 이승만계와 반 이승만계로 갈라지게 된다. 민국당 마산시당부는 52년 7월 10일과 53년 8월 5일, 54년 6월 10일 각각 조직개편을 통해 손성수와 민영학이 번갈아 위원장을 맡아 오던 중 55년 11월 18일 민주당으로 개편된다. 손성수와 민영학은 60년 4.19혁명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후 치러진 마산시장 선거에서 역시 우익단체인 국민회 지회장을 지낸 황장오 등 7명과 함께 출마, 경합을 벌였다. 이 선거에서 민영학(무소속)은 3위, 황장오(무소속)는 2위에 그쳤고, 손성수가 마침내 당선되지만 최초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손 시장은 재임 5개월 만에 5·16군사쿠데타로 물러나고 만다. 해방 후 친일·친미·우익으로 구성된 여당과 야당은 국민의 희생을 불모로 서로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다 결국 군인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마산의 3·15시민항쟁은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던 이용범과 변절자 허윤수 등 몇 명을 날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지역사회에 뿌리 깊은 토착 기득권세력의 판도를 바꾸어내지는 못했다. 특히 61년 5·16쿠데타 이후 박종규리는 새로운 세도가가 들어섰고, 이승만의 선거유세를 대니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이은상 등 문화 기득권세력은 박정희시대에도 여전히

최고 권력자와 지근거리에서 더 큰 기득권을 누렸다.

이은상처럼 3·15의거 이전까지는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부정선거에 앞장서다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고 다시 5·16쿠데타가 일어나자 재빨리 여당에 합류해 당당히 정치활동을 재개한 출세 지향적 기회주의자들도 적지 않다. 3·15의거 직전인 60년 2월에 구성된 '자유당 정·부통령 선거 마산 시대책위원회' 위원 명단과 5·16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된 후 63년 1월 정치활동이 재개되자마자 여당에 합류한 인사들의 명단을 비교해 읽어보면 상당수가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업인이거나 자영업자들이다. 이에 앞서 그들은 63년 정치재개가 허용되자마자 1월16일 오전 시내 미도식당에서 약 2시간동안 회의를 갖고 쿠데타정권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렇게 하여 결성된 공화당이 박정희 장기집권의 기반이 됐고, 여기에 몸을 실은 지역 사람들은 토호로 성장해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친일파와 자유당, 공화당으로 이어지는 토착 기득권세력이 이후 5·6공을 거쳐 지금까지 단절되지 않은 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관변단체의 간부직을 '세습'하다시피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5. 맺음말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지배해온 토호세력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와 해방직후 우익단체에서 비롯되어 역대 정권에 철저히 협력하는 대가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문제는 군사독재가 끝난 이후에도 그들 토호세력이 여전히 관변단체를 장악해오면서 지금도 지역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총연맹 경남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수 씨는 건

설회사 사주이면서 얼마 전까지 경남신문의 대표이사였다. 그는 지역기업체를 협박해 비싼 광고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기소됐다가 신문사 대표직을 물러났지만 지금도 자유총연맹 지회장직은 놓지 않고 있다. 바르게살기 경남협의회장인 최효석 씨도 건설회사 대표다. 그는 평통 자문회의의 경남지역부의장과 창원지검 범죄예방위원회 창원협의회 회장도 함께 맡고 있다. 새마을운동경남지회장인 최광주 회장도 역시 건설회사 사장이다. 그 또한 평통 마산시회장을 함께 맡고 있다. 이들 관련단체는 지회장급 외에 간부들도 대부분 상공인들로 구성돼 있다.

글의 첫머리에서 ‘지방권력’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나 여당은 그렇다 치고, 지역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 서야 할 지역시민단체들의 입장과 태도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2003년 2월 지역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구성을 보고 하는 말이다. 이 단체는 지금도 활동중인데, 출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기존의 기득권세력인 새마을단체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관련단체와 도지사·국회의원 등 실질적인 지방권력자들을 모두 끌어들이어야말로 ‘잡탕’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는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 못지않게 지방권력의 견제와 감시에 주력해야 할 이 단체에 기존의 기득권세력과 실질적인 권력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자치 실패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와 칼럼을 썼다가 오히려 시민단체 쪽 사람들에게 항의와 힐난을 받았다. 그 때 썼던 칼럼의 일부를 옮겨보자.

요즘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은 반드시 ‘지역민주화’를 바탕으로 깔고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게 전제되지 않은 지방분권 운동은 그동안 지방자치를 망쳐 온 권위적이고 부패한 단체장과 그 연고 집단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오는 14일 경남도청에서 결성될 ‘(가칭)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의

임원진 인선안을 보고 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른바 관변단체로 불리는 그들이 주요조직과 직책에 빠짐없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 때 ‘아시아 반공연맹’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자유총연맹의 이름이 딱 하니 들어 있는가 하면, 박정희 정권 때 만든 새마을단체 간부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돼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 만든 바르게살기 회장이 공동대표라는 직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뿐인가. 대표적인 관변여성단체 대표로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압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조수자 씨도 공동대표에 빠지지 않았다. 고문단에는 김혁규 도지사와 허순봉·강삼재·김정부 국회의원이 들어 있었고, 박창식 창원상의 회장과 최위승 경남발전협의회장도 어김없이 포함돼 있었다. 물론 ‘지방분권’이라는 대의(?)를 위해 지역의 모든 세력이 총 단결해야 한다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지방분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분권이 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단지 중앙의 권력을 갖고 오는 차원의 지방분권은 결국 지역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식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¹⁸⁾

결국 이 단체의 상임대표이자 마창진참여자치연대의 공동대표였던 안홍준씨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돼 있고, 고문이었던 강삼재·김정부 당시 국회의원은 각각 안기부 돈 사건과 부인의 돈 선거 문제로 불명예스럽게 국회의원직을 물러났다. 역시 고문이던 박창식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경남프로축구단 대표이사까지 겸직하게 됐으며, 15년간 상의 회장을 장기 집권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 또 자격시비까지 일으키면서 회장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특히 원래 한나라당계 사람으로 김영삼 정권 시절 신한국당 경남도지부 후원회장을 했는데, 김대중 정권으로 교체되자 갑자기 새정치국민회의 경남 후원회장을 맡고 제2건국위원회에 들어가더니, 정권 말기엔 슬그머니 후원회장직을 사퇴했다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신당추진위 경남 상임고문을 맡는

18) 《경남도민일보》, 2003년 2월 7일자

등 권력과의 관계를 절묘하게 유지해온 사람이다. 그는 이후 노무현 정권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진해신항' 명칭 문제로 정권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지역관변단체(진해신항만발전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하는 등 줄타기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처럼 명색이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관변단체나 지방권력에 대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역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또 박창식 창원상의 회장의 이력에서 보듯이 그런 사람을 계속 '활용'해 먹으려는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진보·개혁세력이 '지방권력'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지역민주화 운동'의 주체가 되어달라는 바람에서 이 글을 쓴다.

김주완(Kim, Joo-Wan) wan@idomin.com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논문 <보도연맹원 학살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 : 경남 마산지역의 사례와 인물을 중심으로>을 냈으며, 저서에 《마산·창원 역사읽기》, 《토호세력의 뿌리》가 있다.